이런 국회엔 세금이 아깝다

태평로

최 원 규
논설위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으로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다. 두 사람은 애초 구속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래도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당사자에게 고통이다. 어느 법조인 말처럼 재판 지연은 신체의 구금이 없더라도 정신을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다툴 게 많아서라면 모르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김 전 실장 등이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것으로, 3년 전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2021년 7월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 에 연루돼 특검을 사퇴하고, 특검보까지 함께 물러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형사재판을 하려면 검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다 사라져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이 사표를 내면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관련 특검법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새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특검법에는 특검 부재 시 특검 임명 절차는 있지만 특검 부재 시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일종의 입법 미비다. 그렇다면 국회라도 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안 했다. 그러다 지난달에야 개정안이 통과됐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과 특검보가 모두 공석이 됐을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한다는 조문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 간단한

특검법 뒤늦게 개정해 재판 지연
낙태죄 법 개정 시한 2년 넘겨
야간집회 법 개정은 12년째 방치
그러면서 검수완박 등 입법 횡포

일을 하는 데 1년 5개월이 걸렸다. 재판 지연을 방치한 법원, 문 전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 책임도 크다.

사실 국회에서 이런 정도의 직무유기는 약과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2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다. 낙태 문제는 어린 생명과 그 생명을 담은 여성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임신 중지 결정 가능 기간 등 결정해야 할 요소가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할 뿐 입법엔 별로 관심이 없다.

야간 옥외 집회 문제는 더 심각하다. 헌재는 2009년 9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10년 6월까지로 정했는데 국회는 12년 넘은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는 사실상 24시간 허용되는 상황이고, 경찰은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는 다른 조항을 끌어들여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큰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중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나.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입법을 하라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 의무를 저버린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북한 김여정이 하명하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처벌하는 법도 시행했고, 검찰 수사 방탄 차원에서 '검수완박법' 도 밀어붙였다.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입법권을 멋대로 휘두른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벌인 입법 독재이자 횡포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런 국회를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게 너무 아깝다.

김준의 맛과 섬 [125]

무안 도리포 곱창김

어릴 때 살았던 산골에서는 설을 앞두고 김을 세찬으로 돌렸다. 당시 김은 효자 수출품이자 차례상에 올리는 귀한 제물이었다. 수출이 어려워지고 김 산업이 침체하자 1990년대 강원에 '긴잎 돌김', 충남에 '참김' 그리고 전남에 '잇바디돌김' 등을 지역 특산물로 발전시키는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김이 수산물을 대표하는 수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은 크게 일반김, 곱창김, 돌김으로 구분한다. 이를 종자로 구분하면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이 있다. 가장 많이 양식하는 방사무늬김이 일반김이며, 잇바디돌김이 곱창김이다. 엽채가 곱창처럼 생긴 곱창김은 전라남도 진도, 해남, 무안, 신안 지역 등에서 양식한다.

곱창김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양식하며 한두 차례 채취한 후, 일반김을 초봄까지 이어서 양식한다. 김 양식은 수온과 영양염류에 민감하다. 올해처럼 가뭄이 심하거나 고수온이 지속되면 좋은 김을 기대하기 어렵다. 곱창김은 일반김보다 값은 좋지만 생산량이 적고 채취 횟수가 적다. 또 주변에 다른 김을 양식하지 않는 청정 지역이라야 좋은 곱창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양식 조건에도 불구하고 곱창김만을 고집스럽게 채취하는 마을이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다. 이곳은 한때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매립 위기에 처했던 갯벌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새만금간척의 찬성과 반대 논란 속에 갯벌의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도리포 일대를 포함한 영산강 개발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무안갯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안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도리포 곱창김은 갯벌에 기둥을 세우고 김을 매달아 양식하는 지주식 곱창김이다. 곱창김은 거칠지만 식감과 감칠맛이 강해 조미를 하지 않고 구워 먹기 좋다.

도리포는 곱창김만 양식하며 어장을 관리하고 양식 기술을 발전시킨 덕에 일반김처럼 여러 차례 채취한다. 갯벌과 바다를 보호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식량을 준비하는 일이며, 생물다양성으로 지구를 지키는 일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 說

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부실 수사 논란을 낳았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에게서 1조3500억원을 모은 뒤 55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사기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 법조계 인사 등 20여 명이 적혀 있는 이른바 '펀드 하자(瑕疵)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문건에는 전직 검찰총장이 옵티머스가 추진하던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사실은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범인 옵티머스 이사 윤모씨의 아내는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었다. 그도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았지만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까지 있었다.

문 정부 때 4000여 명 투자자에게 1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 사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펀드의 전주(錢主)는 재판받던 중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당시 검찰은 펀드의 전주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녹취록을 수사했지만 이 전주가 옥중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 을 폭로하자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면서 민주당 쪽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문 정부 실세였던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설립한 디스커버리 펀드도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지 3년 뒤인 작년에야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들 대형 펀드 사기 사건엔 모두 권력자들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문 정부 내내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하던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기까지 했다. 윤 정부가 출범한 뒤 합수단이 부활돼 옵티머스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인 17일 입국해 검찰로 압송됐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도피처였던 태국에서 압송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와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도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은 이날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난 정황을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고 그 대가로 북측에 최소 200만달러 이상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은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이 돈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 자금 밀반출은 김 전 회장도 인정한 내용이다.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과 이듬해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 수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이 지사는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고, 그 행사를 총괄한 사람이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였다.

이 대표 주변 인물 상당수도 쌍방울과 연관돼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2019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같은 사건의 또 다른 변호사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출신이다.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래서 불거진 것이었다. 이화영 부지사도 부지사로 발탁되기 전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렇게 얽힌 관계인데 '모른다' 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깊은 관계일 수 있고, 얼굴을 보았어도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어느 쪽인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 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그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이 대표가 쌍방울과 무관하다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고, 검찰도 정확한 증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동영상 사설

'촛불 중고생 연대' 알고 보니 회원 97%가 성인

서울시가 보조금 전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라는 단체의 행각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이 단체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노골적 정치 활동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2021년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중고생 운동사' 라는 책을 냈는데, 김일성이 대표를 맡았다는 '타도 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 을 자기들이 계승했다는 도표를 넣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바뀌고서야 서울시는 "책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체가 중고생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기준 회원 100명 중 40~50대가 60명, 60대 이상이 18명으로 80% 가까이가 40대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20~30대가 19명이고 정작 10대는 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실상 성인들로 구성된 정치 이념 단체 아닌가. 이런 단체가 2021년 3월 민간단체로 등록한 다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모두 9100만원 받아냈다. '촛불' '중고생' 이란 간판을 달고 국민 세금을 받아 친북과 정치 활동에 써온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민간 단체 보조금 사업은 최근 수년간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은 일부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족이 아닌 별도 단체가 사업비를 전국 관광지나 펜션 여행 등에 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민간 단체 세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

"비 이재명계라고 무사? 박용진 조응천 이낙연도 숙청감...더 늦기 전 알아서 하라"

중대 갈림길 선 한국 범 좌익...사느냐 탈출이냐 | 민주당 뒤엔 운동권, 운동권 위엔 RO(극좌 혁명조직)?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한국 범(汎) 좌파의 지금 중대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이 대표하는 현재의 좌파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 진보로 환골탈태할 것인가?

이재명이 대표하는 현재의 좌파란, 주사파가 주도하는, 주사파 노선의 좌파를 말한다.

6.25 후 한국 범좌파의 역사를 훑어보자. 1950년대에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이란 혁신계 정당이 출현했다. 두 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진보 정당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이중 첩자 양명산(梁明山)에게 받은 돈이 문제가 돼 처형되면서, 이 짧은 혁신정당사는 끝났다.

그리고 4.19가 났다. 1960년의 '서울의 봄' 이었다. 수십 개 혁신 정당·사회 단체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유럽식 온건 진보 계열, 그리고 이보다 더 왼쪽으로 기운 계열로 나뉜다. 더 왼쪽 계열은 유럽 민주사회주의보다는 '민족·민주·자주'란 말을 더 좋아했다. 훗날의 NL 비슷한 성향이었다. 그러다 5.16이 왔다. 이들은 싹쓸이 당했다.

이때의 혁신계 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교훈이 있었다. 한국에선 유럽식 온건 진보(민주사회주의)가 성립하기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이다. 왜?

권위주의 우파의 불관용(不寬容) 때문만이 아니었다. 북한과 강경 혁신계 역시 온건 혁신계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온건 혁신계는 그저 숙주에 불과

강경 혁신계는 온건 혁신계를 숙주(宿主)로 이용만 하려 했지,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레닌·스탈린·마오쩌둥 이래, 극좌는 늘 민주사회주의를 '수정주의'라며 숙청했다. 4.19 후의 강경 혁신계도, 온건 혁신계를 '반동'이라고 배척했다. 온건 혁신계가 기댈 언덕이 우(右)로도 좌(左)로도 없었던 셈이다.

유신 시대를 통해 온건 혁신계 흐름은 민주화운동과 합쳐졌다. 강경 좌파 흐름은, 3공, 4공(유신) 시절의 신문 지면을 장식던 '지하조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

1980년대 중반, 사회운동 주도권이 온통 주사파 손아귀로 넘어갔다. 그들은 '군사독재 타도' 뿐 아니라 '자유주의 타도' '수정주의 타도'를 외쳤다. 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를 적(敵)으로 친 것이다. 온건 진보, 민주사회주의도 적으로 쳤다.

이는 한국 사회운동이 김일성주의에 납치당한 통한(痛恨)의 순간이었다.

김대중 숙주(宿主) 삼아 뿌리내린 주사파,
노무현 시대엔 숙주 잡아먹고...
문재인 시대엔 발톱 드러내 체제 전복 기도

오늘의 범좌파 상황은 어떤가? 민주화 후 주사파는 김대중 세력을 숙주(宿主)로 삼아 뿌리내렸다. 노무현 때는 그 숙주를 아예 들어먹었다. 열린우리당이 그것이다.

극좌는 늘 그런 식이다. 온건 진보가 민주노동당을 만들면 그 당에 침투, 그것을 주사파로 변질시킨다. 문재인 때는 반미(反美)·종북(從北)·친중(親中) 체제 전복으로 치달았다. 숨겼던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광우병 난동 때 저들은 이명박 정권을 깔아뭉갰다. 촛불 정변 땐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다. 공공·민간 부문을 모두 먹어갔다. 우파였던 언론이 '극좌 촛불' 선봉에 섰을 만큼 세상이 뒤집혔다. 보수였던 정당마저 보수이기를 버리고 강남좌파로 행세했다.

3.9 대선으로 윤석열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극좌 체제 전복 계획은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다.

이 무렵 극좌 운동권은 극도로 타락했다. 당초에 내걸었던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돈맛, 권력 맛을 본 도둑 떼가 되었다. 대장동과 백현동을 해 먹었다. 뇌물을 받아 챙겼다. 기자들과 대법원 판사를 매수했다. 조폭과 한패가 되었다. 번번스럽고 야비하고 추악한 과물 그 자체가 되었다.

이재명과 함께 죽을까, 탈출할까

이쯤 되었으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좌파에 합리적인 일부라도 남았다면 그들은 성찰해야 한다. 이재명과 함께 고사(枯死)할 것인가, 탈출구를 찾을 것인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인가? 이재명 손절(損絶)과 분당(分黨)? 그 정도론 어림도 없다.

결론을 말하겠다. 이재명과 정사(情死)하고 싶지 않다면 주사파와 결별하고, 조지 오웰이 말한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로 전환하라. 전체주의 좌익을 떠나, 자유 체제하의 합리적 진보로 나가라. 이게 적당한 미봉책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다.

1975년 사이공 함락 후에 보니, 남베트남은 이미 전면에 나선 민족 해방 전선(NLF)도 아닌, 북베트남 직계 인민혁명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오늘의 한국에도 법 위에 운동권, 그 위에 RO(극좌 혁명조직), 그 위에 또 무엇 있을지 누가 아는가?

이제 정말 알아서들 하시라

이제 알아서들 할 때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나자, 멘셰비키는 숙청당했다. 김일성 세상이 되자, 연안파·소련파 공산당도 숙청당했다. 김정은 세상이 되자, 고모부 장성택도 숙청당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 비(非) 이재명계라? 박용진 조응천 이낙연도 어김없는 숙청 감이다. 더 늦기 전에 알아서들 하시라.

자유대한민국은, 오는 3월 8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기해 어떤 판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자유 진영 국민, 더불어민주당 제정신 있는 일부, 정말 알아서들 하시라.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월 13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이 광고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
뉴데일리